

PEF 규율체계 정비… 5개 증권사, 20조 모험자본 본격 공급

〈한국투자·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

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IB 등 ‘생산적금융’ 로드맵 공유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 개선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원칙 확립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할 것”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부터 사모펀드 규율,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생산적금융’ 로드맵을 내놔다. 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자금 흐름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메시지가 함께 담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선별해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의 출발점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를 지목했다. 금융위는 벤처·스타트업 주식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증권사 대표 및 주요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거래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6년간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실상 단독으로 전자등록을 수행해 온 구조에 경쟁을 도입해, 비상장 주식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신규 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PEF 규율 손질·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자본시장 자금 공급의 또 다른 축인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규율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한다. 이 위원장은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도입해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참여를 차단한다.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운용사에는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GP 단위의 정기 보고 체계를 도입해 투자·인수 기업의 자산·부채와 유동성 등 주요 경영정보를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도 함께 정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마련과 적용범위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IB 모험자본, 계획에서 성과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합금융투

자사업자로 지정·인가된 대형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도 공유됐다. 이 위원장은 “대형IB가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공급 의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감독방식 전반 재설계… ‘리스크 차단’ 방점

금감원 조직개편

자본시장, 펀드심사 조직 확대
은행, 대출·영업 방식 감독 강화
보험, 리스크 관리 기능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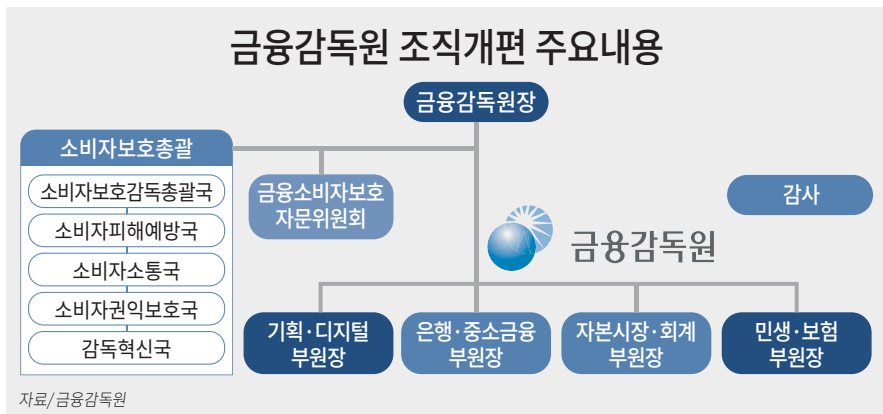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이 감독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분쟁조정이나 제재로 대응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설계와 영업, 시장 거래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해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자본시장·은행·보험·가상자산 등 전 업권의 감독 조직과 기능이 동시에 조정됐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 전면 재배치

자본시장 부문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이뤄졌다.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문제를 반영해, 감독 기능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점검·상시 감시 체계로 재편됐다. 자산운용, 시장 감시, 회계 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자산운용감독국에는 특별심사팀이 신설돼 펀드 심사 조직이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 체제로 확대됐다. 새로 신설된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와 외국계 펀드를 전담 심사한다. 기존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상품 전반의 심사 제도 개선을, 펀드심사2팀은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등 추가 업무 수요 대응을 맡는다.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됐다. 조사 조



직 내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1팀·2반 체제로 개편해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이상 거래 탐지, 정보 분석을 세분화했다.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알고리즘·고빈도 거래 확산으로 복잡해진 거래 구조를 반영한 조치다. 회계 부문 역시 기업 회계 오류와 고의적 왜곡을 조기에 포착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능이 보강됐다.

◆은행-분쟁조정 이관으로 감독 책임 일원화

은행 부문에서는 분쟁조정 기능 이관이 핵심 변화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집중돼 있던 분쟁조정 업무를 은행 감독 부서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상품 심사부터 영업 감독, 분쟁조정, 검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은행 상품과 영업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까지 수행함으로써, 민원 발생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감독 범위도 건전성 관리에 그치지 않고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확대됐다. 금리 산정 방식, 수수

료 구조, 상품 설명 과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능이 강화된다.

◆보험·가상자산·디지털 금융-신유형 리스크 전담 체계

보험 부문에서는 상품 감독과 리스크 관리 기능이 세분화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상품 감독 조직을 나누고, 회계 기준 변화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계리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보험 상품 구조와 가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다.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조직 보강이 이뤄졌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거래 구조와 영업 관행, 이용자 보호를 함께 점검한다.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전산 장애 등 사이버 리스크를 분석·관리하는 기능도 강화됐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과 조직적 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과 금융범죄 정보 분석 기능도 신설됐다.

/허정윤 기자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 한번에 확인하세요”

예탁결제원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금융당국 정책 지원·시장안정 기여”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면서,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1월 12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개정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이-세이프)’와 투자자·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SEIBro(세이브로)’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는 SEIBro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등 기타 기관 17곳 등 총 4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이들 참가자가 등록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은 총 3341건으로, 이 가운데 등록유동화는 196건, 비등록유동화는 3145건에 달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금융당국의 자산

유동화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 구축했으나, 이후 공시 연계 확대와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까지 정보공개대상이 확대되자, 발행내역과 의무보유 내역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법령 제·개정 지원과 함께 시스템 개발, 참가자 안내를 병행했다.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지원했고,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공개 절차를 규정한 내부 업무규정도 제정했다. 아울러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위험보유 의무 감독을 위한 신규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설명회와 사전 테스트도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총 네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과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자자는 분산돼 있던 유동화증권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발행 현황과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